

# 국가미래전략 :

## KDI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중심으로

송인호

KDI 경제정보센터 소장



# Contents

01

KDI 국민 여론조사 개요

02

새 정부의 국정 최고 목표

03

새 정부의 구체적 정책수행 방향



# KDI 국민 여론조사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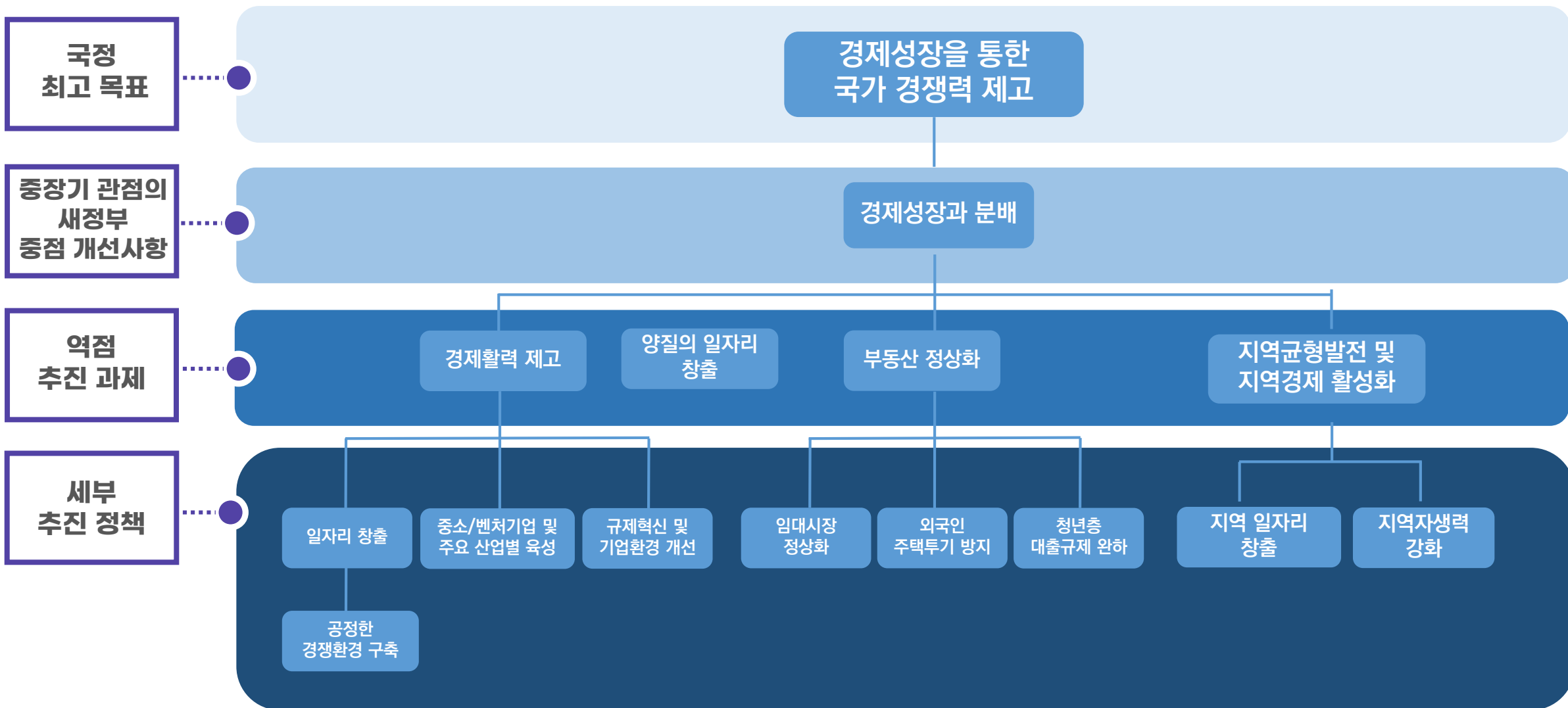
- 주 제: 새 정부에서 수행할 우선 정책과제
- 대상/기간: 경제전문가 518명(2022. 3.17~18), 일반국민 1,000명(2022.3.17~21)
- 조사방법: 자기기입식 웹조사
- 표집 방법: 경제전문가(KDI 경제전문가 패널), 일반국민(지역, 성별, 연령별 층화표집)
- 표본 오차: 95% 신뢰수준에서  $\pm 3.1\%p$

표 1 경제전문가 응답자

직업군	응답자 수(명)	비중(%)
교수	175	33.8
연구원	98	18.9
기업인	182	35.1
금융인	63	12.2

표 2 일반국민 응답자

구분		응답자 수(명)	비중(%)
성별	남성	511	51.1
	여성	489	48.9
연령대	20대	193	19.3
	30대	198	19.8
	40대	235	23.5
	50대	252	25.2
	60대 이상	122	12.2



02

##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목표

# 02 (국정 목표) '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'

##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새 정부에서 추구해야 할 최우선 국정 목표로 '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'를 지목

- 경제전문가: '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'(46.9%), '균형발전 및 사회적 통합 강화'(32.2%)
- 일반국민: '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'(29.2%), '복지 확대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'(22.0%)

차트 1 경제전문가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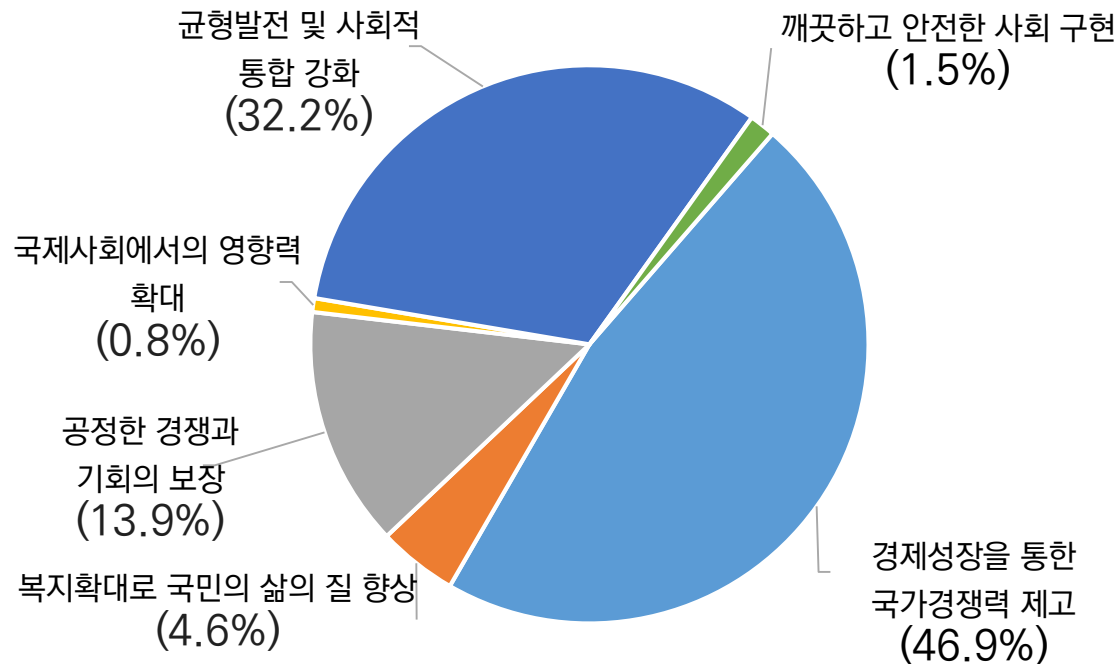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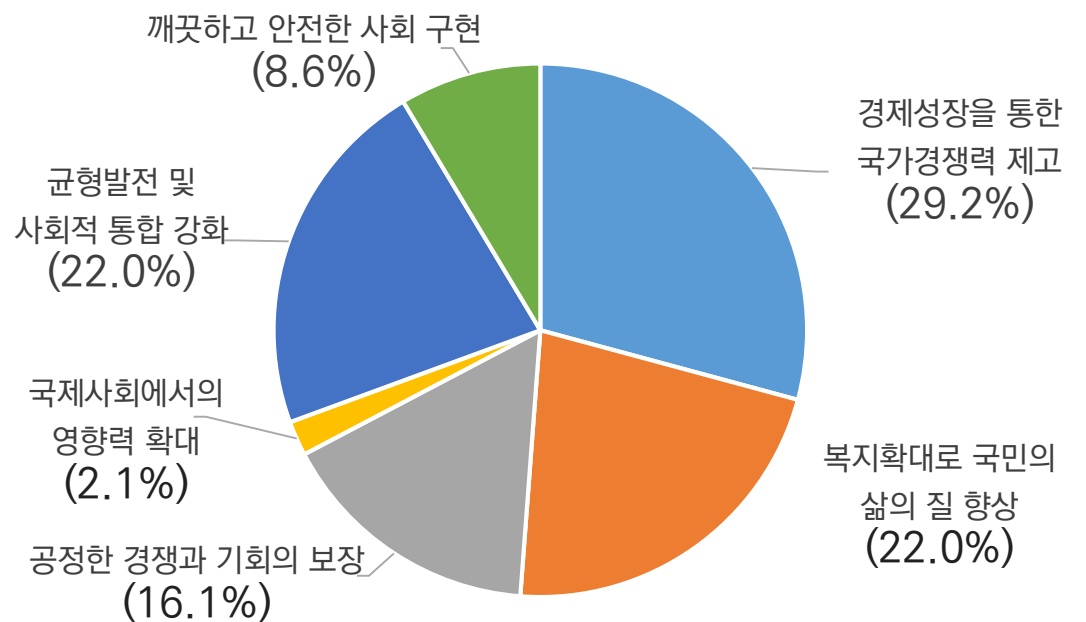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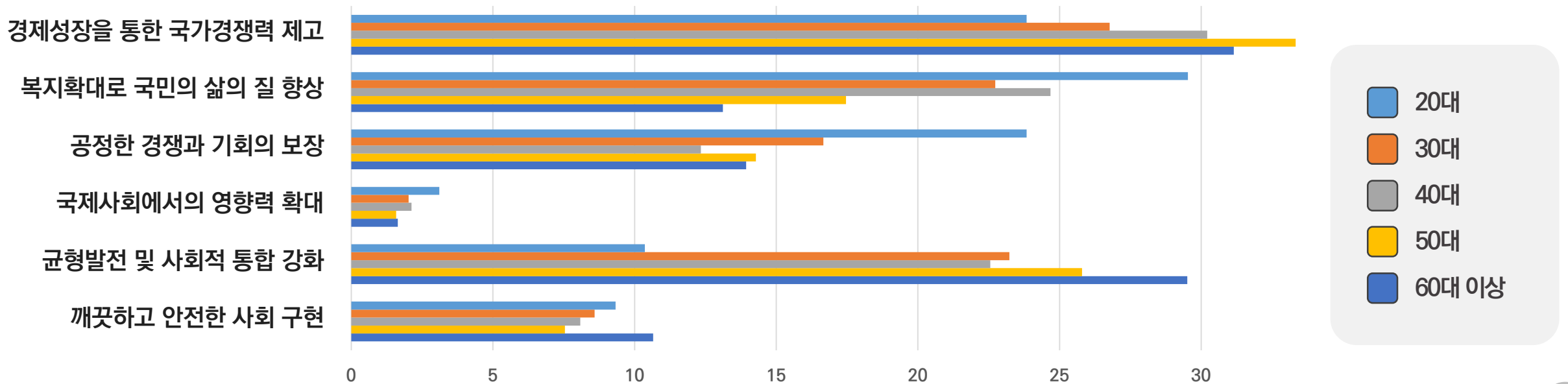
차트 2 일반국민 응답



# 02 (국정 목표) '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'

- 30대 이상의 모든 연령층이 '국가경쟁력 제고'를 국정 최고 목표로 지목한 반면, 20대는 '복지 확대'(29.5%)와 '공정경쟁'(23.8%)의 순서로 국정목표를 생각하고 있어 20대에 타기팅한 국정 수행은 별도의 고민 필요
  - (20대) 복지확대(29.5%), 공정한 경쟁(23.8%), 경제성장(23.8%)
  - (30대) 경제성장(26.8%), 균형발전(23.2%), 복지확대(22.7%)
  - (50대) 경제성장(33.3%), 균형발전(25.8%)
  - (60대 이상) 경제성장(31.1%), 균형발전(29.5%)

차트 3 연령대별 응답



03

## 구체적 정책수행 방향

- 경제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국정 목표하에 **중장기적 정책방향**에서 새 정부가 임기 기간 동안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부문으로 **'경제성장과 분배'** 그리고 **'노동/일자리'**를 지목

차트 4 경제전문가의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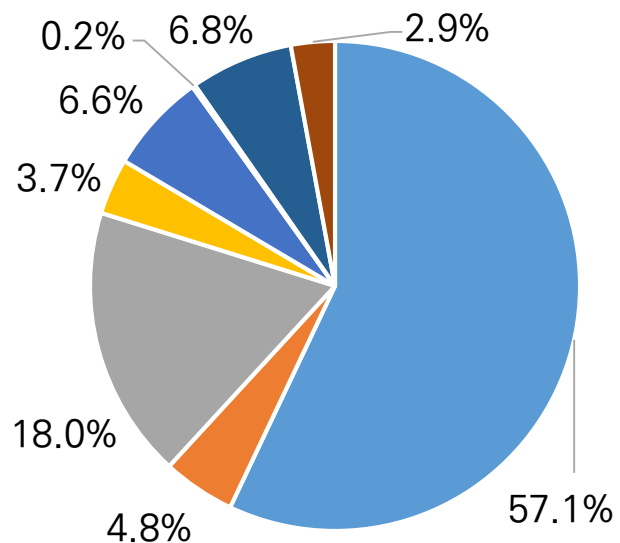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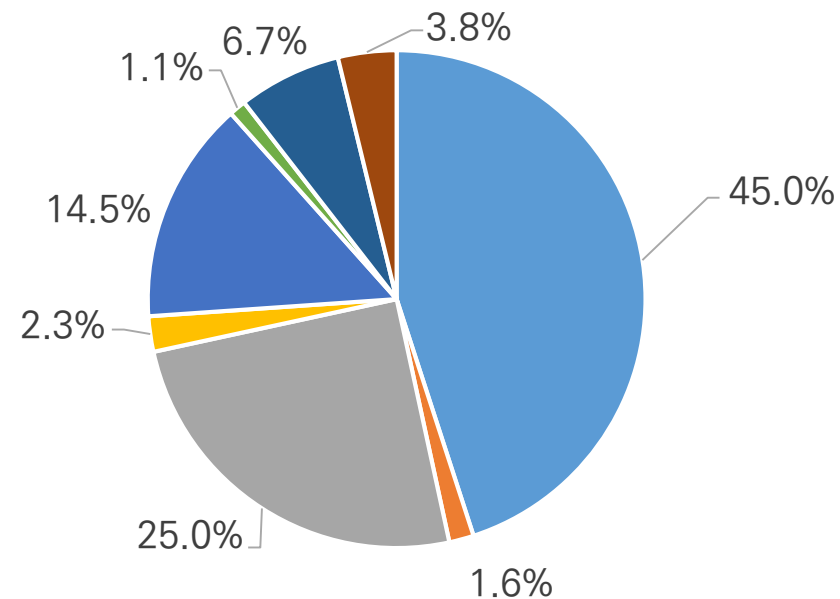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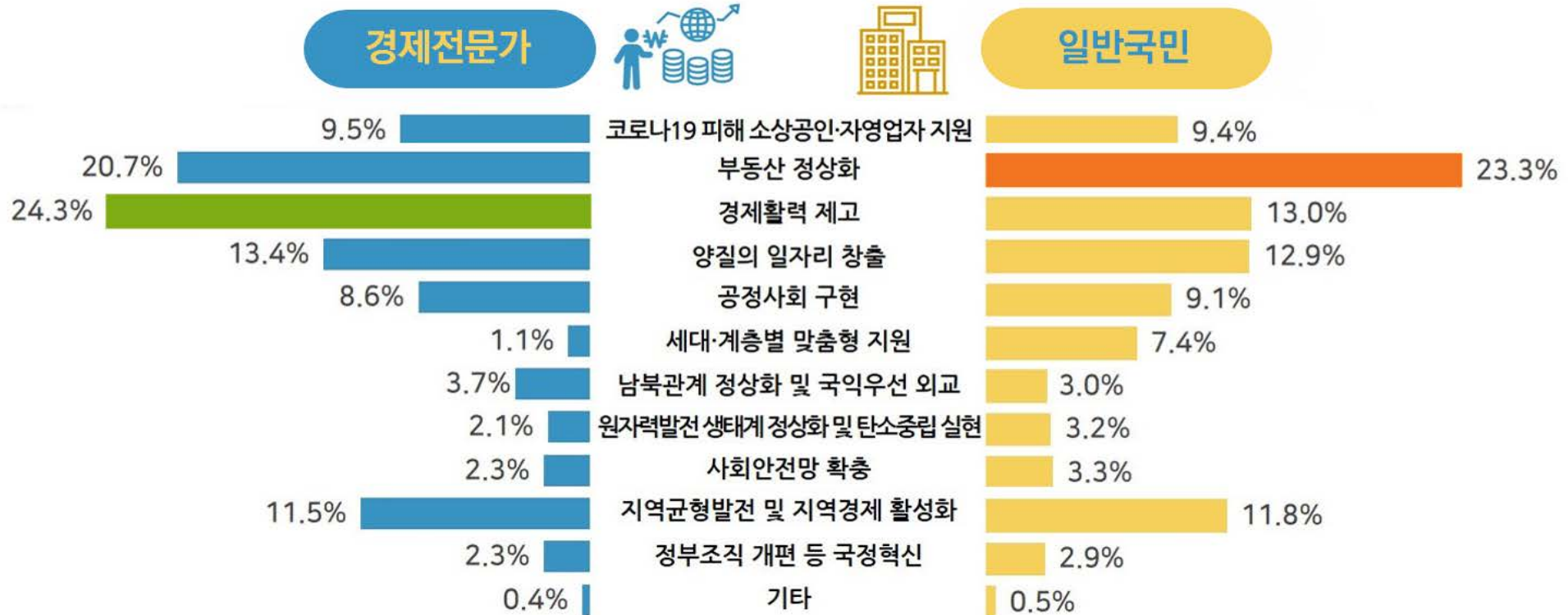
차트 5 일반국민의 응답



# 03 (단기) '경제 활력'과 '부동산 정상화'

- 단기적 관점에서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정책 방향으로 '경제활력 제고' (경제전문가 24.3%), '부동산 정상화' (일반국민 23.3%, 경제전문가 20.7%)를 강조

차트 6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응답



# 03-1 (경제활력 제고) '일자리 창출'과 '규제 혁신'에 주력해야

-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'일자리 창출'과 '규제혁신 및 기업환경 개선'을 주문
-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'공정한 경쟁환경 구축'이 중요해

차트 7 경제활력을 위한 구체적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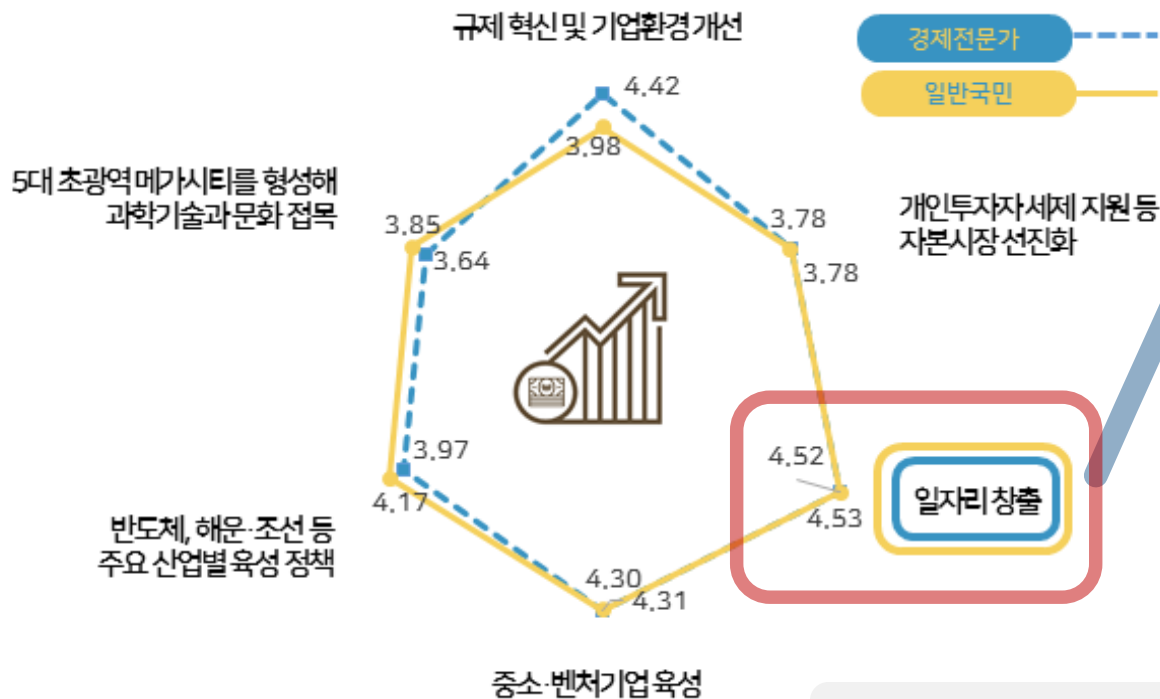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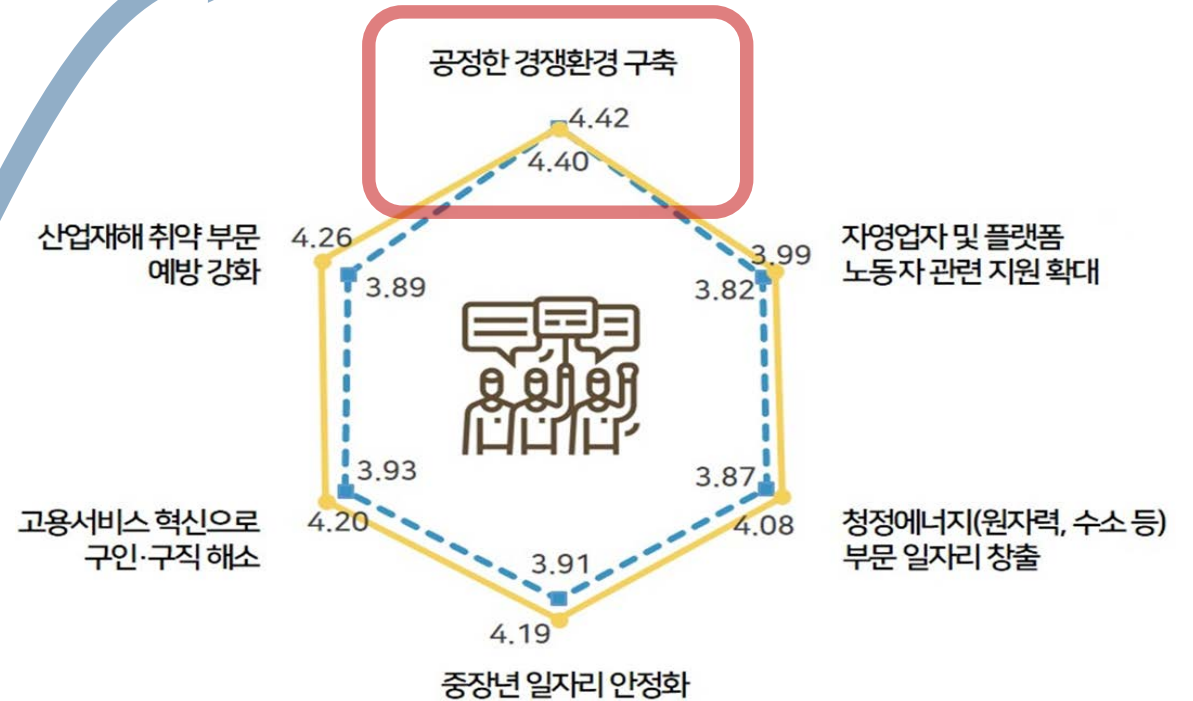


차트 8 좋은 일자리 창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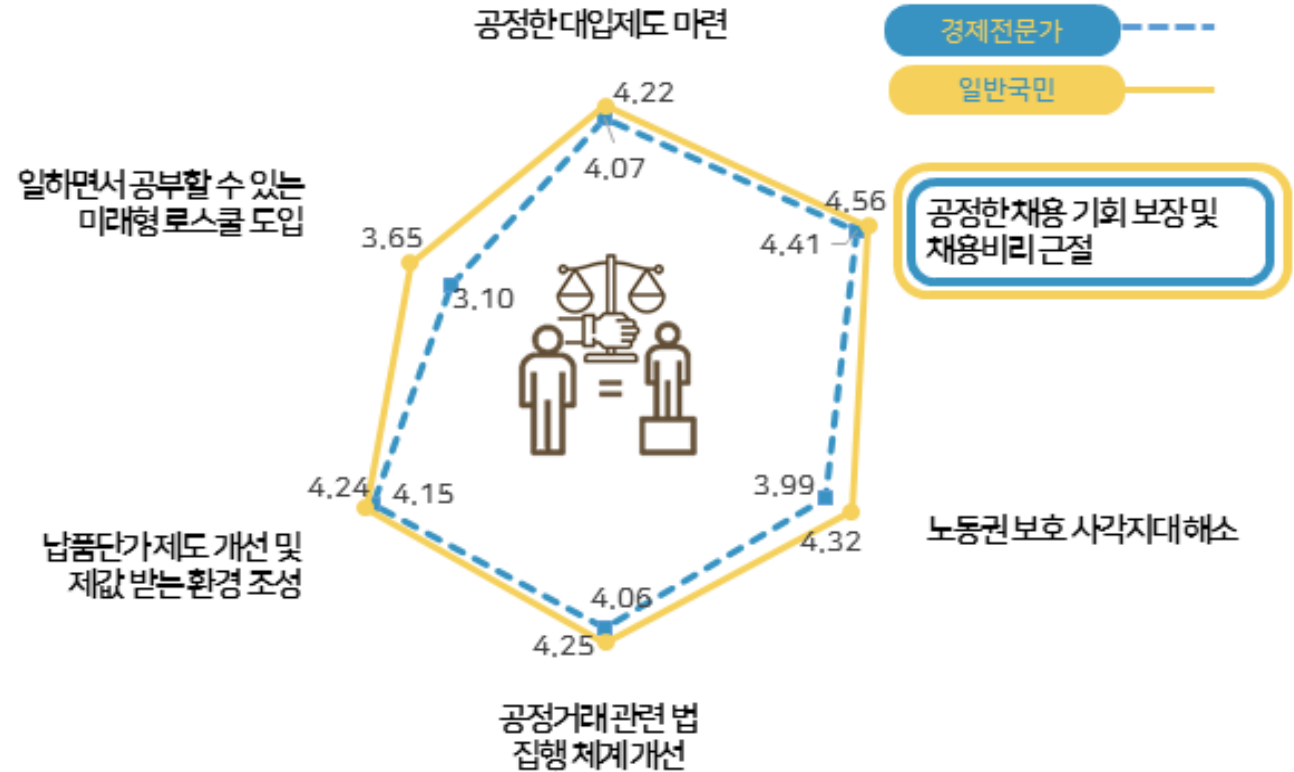


각 정책에 대해 5점 척도를 5점 만점으로 평균화  
 (1. 전혀 필요없음 2. 필요없음 3. 보통 4. 필요 5. 매우 필요)

##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'공정한 채용기회 보장 및 채용비리 근절'을 가장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

- 경제전문가는 '공정한 채용 기회보장 및 채용비리 근절'(4.41 점)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했으며, 다음으로 '납품단가 제도 개선 및 제값 받는 환경 조성'(4.15점)을 주요한 정책으로 생각
- 일반국민 역시 '공정한 채용 기회보장 및 채용비리 근절'(4.56점)을 가장 중시하였고, '납품단가제도 개선 및 제값 받는 환경 조성'(4.24점)도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

차트 9 공정사회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정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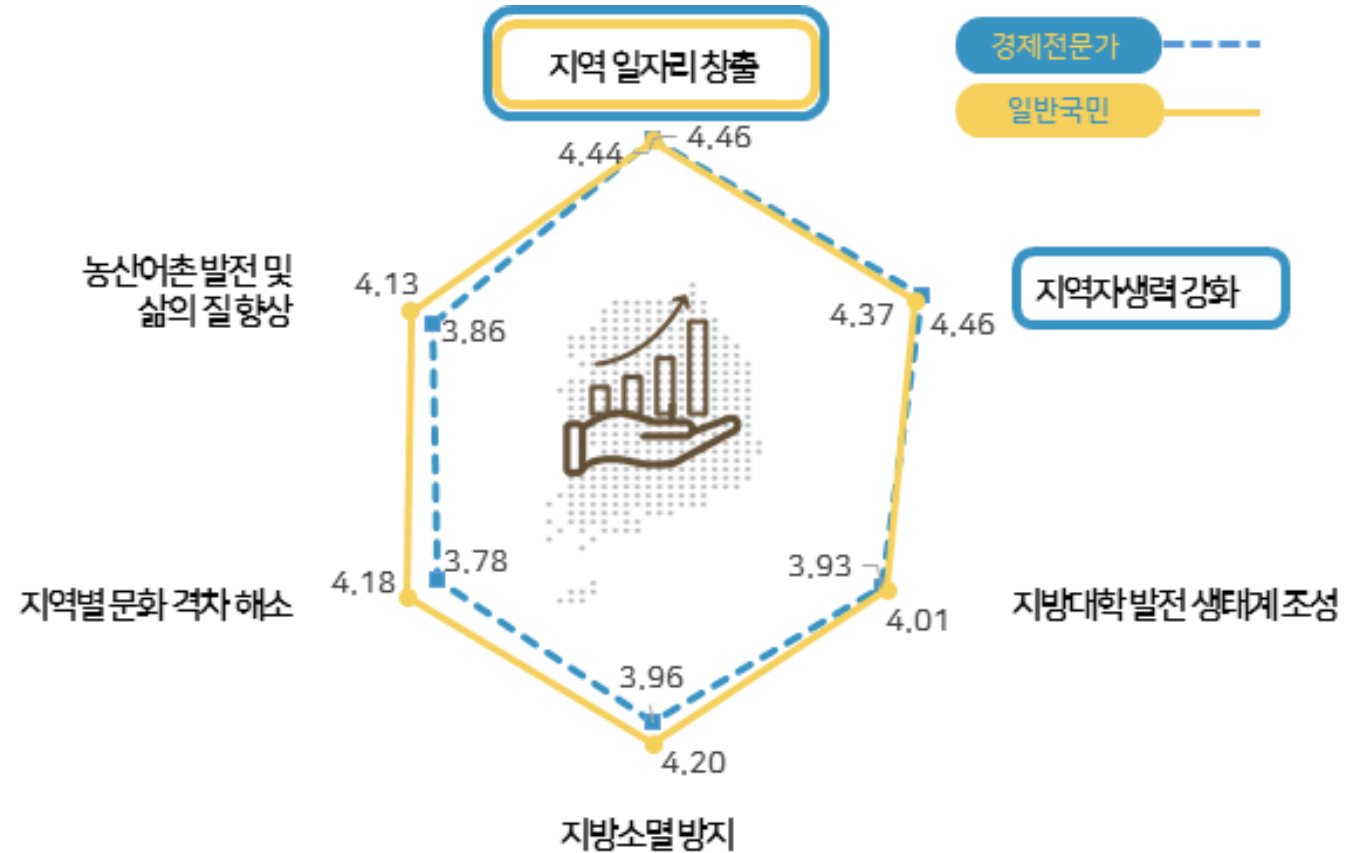
각 정책에 대해 5점 척도를 5점 만점으로 평균화  
(1. 전혀 필요없음 2. 필요없음 3. 보통 4. 필요 5. 매우 필요)

# 03-3 (지역 균형발전) '지역 일자리 창출' 및 '지역 자생력 강화'

-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**지역 균형발전**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점 과제로 **'지역 일자리 창출'**과 **'지역 자생력 강화'**를 지목
- 경제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'지역 일자리 창출'(4.46 점, 4.44점)과 '지역 자생력 강화'(4.46점, 4.37점)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

차트 10

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해야 할 중점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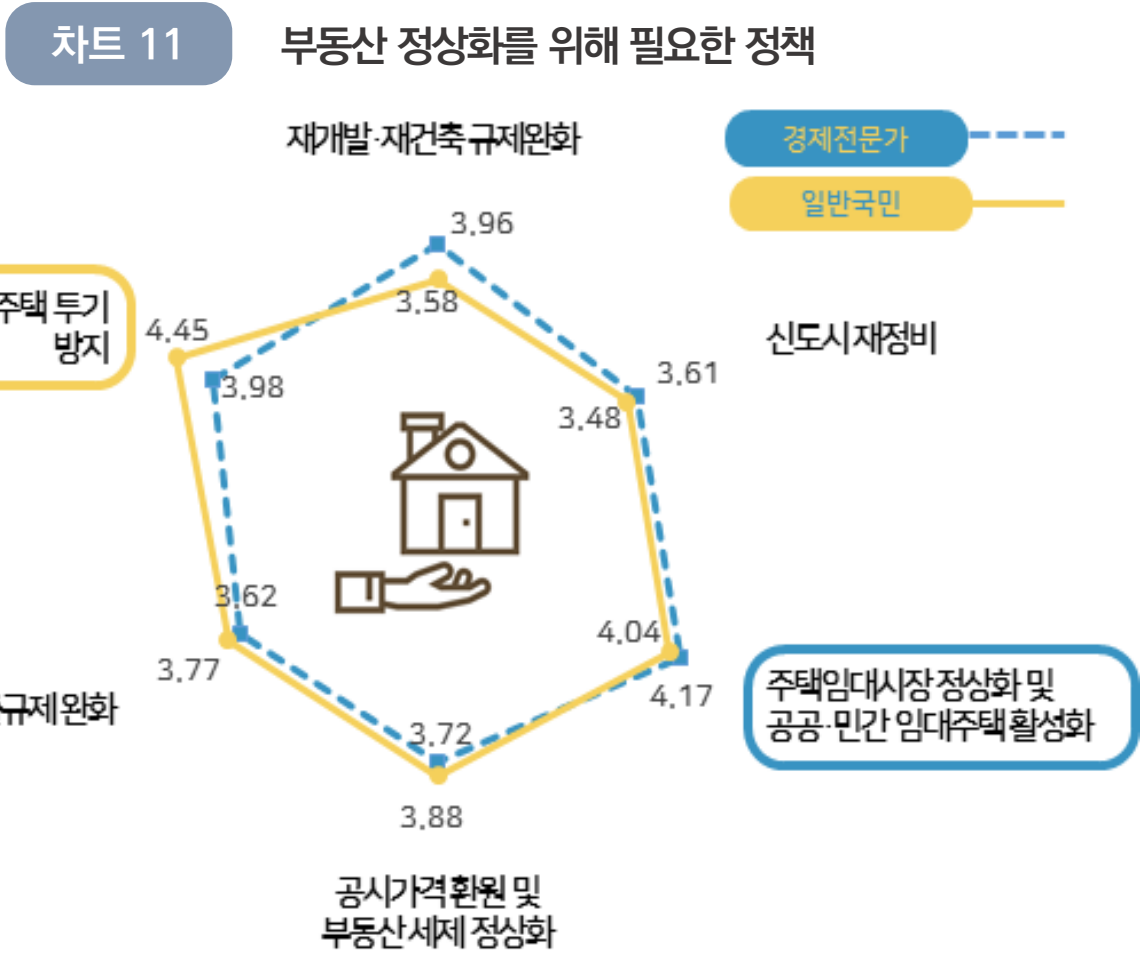


각 정책에 대해 5점 척도를 5점 만점으로 평균화  
 (1. 전혀 필요없음 2. 필요없음 3. 보통 4. 필요 5. 매우 필요)

# 03-4 (부동산 정상화) '임대시장의 정상화'

##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서는 '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공공/민간 임대주택 활성화'와 '외국인 주택 투기 방지' 대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돼야

- 경제전문가는 '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공공/민간 임대주택 활성화'(4.17점)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했으며, 그다음으로 '외국인 주택투기 방지'(3.98점)와 '재개발/재건축 규제완화'(3.96점)를 지목
- 일반국민은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으로 '외국인 주택투기 방지'(4.45점)를 가장 강조했고, '주택임대시장 정상화 및 공공/민간 임대주택 활성화'(4.04점)도 필요한 정책으로 인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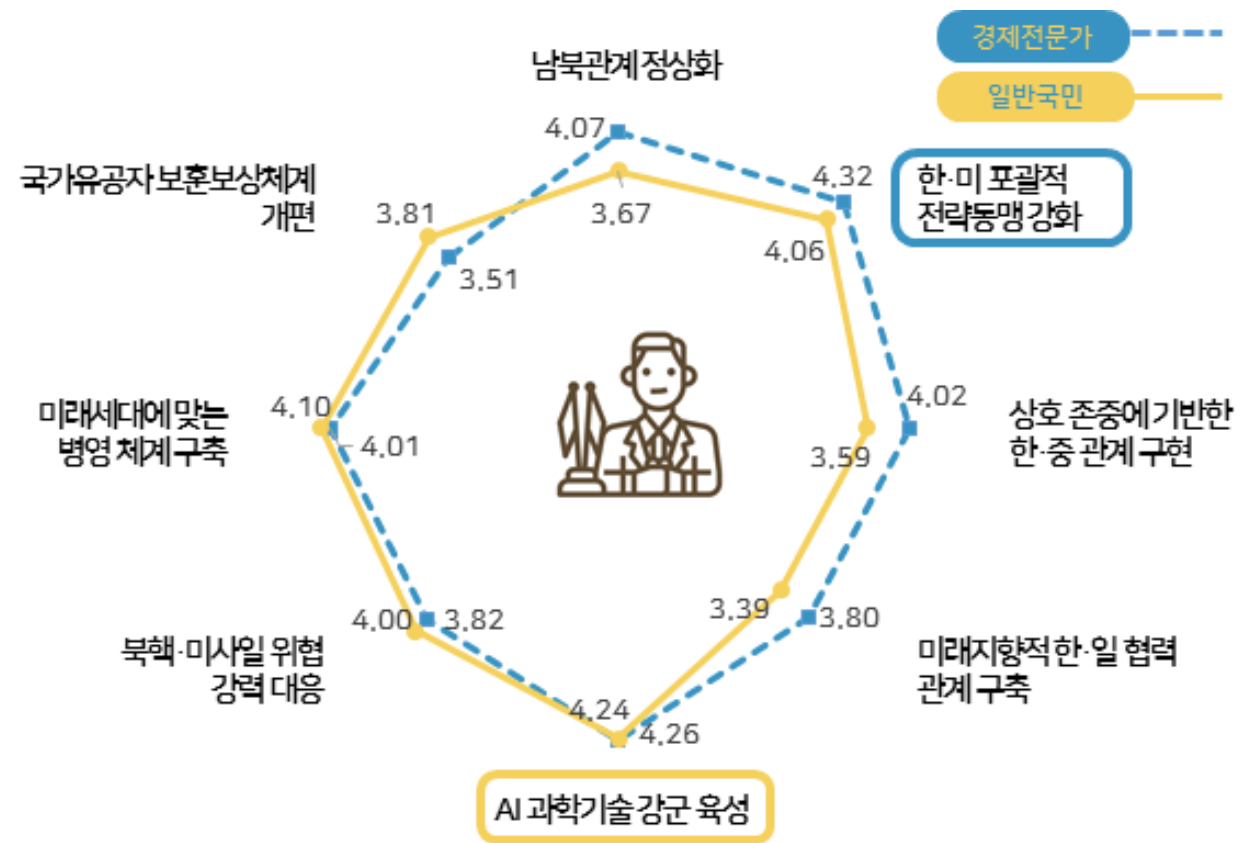
각 정책에 대해 5점 척도를 5점 만점으로 평균화  
 (1. 전혀 필요없음 2. 필요없음 3. 보통 4. 필요 5. 매우 필요)

# (외교 및 안보) '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 강화'

■ 외교 및 안보 관련 정책으로 경제전문가는 '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강화'를, 일반국민은 'AI 과학 기술 강군 육성'을 우선적으로 당부

- 경제전문가는 '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'(4.32점)가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응답했으며, 다음으로 'AI 과학기술 강군 육성'(4.26점)을 주목
- 일반국민은 'AI 과학기술 강군 육성'(4.24점)을 가장 중시하였고, 그다음으로 '미래세대에 맞는 병영체계 구축'(4.10점), '한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'(4.06점)의 순으로 응답

차트 12 외교 및 안보 관련 정책



각 정책에 대해 5점 척도를 5점 만점으로 평균화  
 (1. 전혀 필요없음 2. 필요없음 3. 보통 4. 필요 5. 매우 필요)